

다중적 파국의 시대, 존 벨러미 포스터가 제시한 현대 제국주의의 특징과 국제적인 사회운동의 전략 제안¹⁾

김민정

1. 자본주의의와 수탈

자본주의는 식민지 그리고 제국주의 세계 체제와 분리해 파악할 수 없다.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권력의 폭력적 실행을 설명해야 한다. 역사상 자본주의는 폭력적 권력 행사가 상존하는 식민지와 제국주의 세계 체제를 토대로 존재해 왔다. 자본주의와 토지의 연관성, 불로소득 노동, 신체적 삶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물질적 조건을 파악하려면 착취(exploitation)의 내적 현실 너머를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수탈(expropriation) 또는 자본의 무한 축적을 위해 탐색했던 등가성(equivalent) 없이(또는 상호 교환 없이) 전유하는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전제 조건은 봉쇄, 토지 탈취, 농민 수탈, 식민지 수탈의 형태로 나타나는 잔인한 수탈 체제이며, 이는 프롤레타리아화, 대량 학살, 노예제도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식민지 정복을 통한 인민 토지 수탈, 원주민 수탈, 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 약탈은 산업 자본주의와 새로운 축적 체제의 부상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무자비한 수탈은 중상주의 시대와 함께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적인 규모의 토지, 노동, 육체적 삶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수탈이 오늘날까지 자본주의의 전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착취 개념과 수탈 개념은 의미가 다소 중복된다. 그럼에도 분석적으로 구별되어 동일성 속의 차이, 즉 변증법적 관계를 이룬다. 착취는 주로 직접 생산자로부터 잉여 가치를 추출하는 공식적 평등 교환 과정을 통해 잉여 가치를 전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수탈은 형식적으로도 교환이 작동하지 않고 노골적 약탈 또는 탈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후기 자본주의와 후기 제국주의에서 평등 교환은 점점 더 수탈 체제를 숨기는 장막이 되었고 불평등 교환의 영역이 넓어졌다. 독점적인 다국적 기업이 실행하는 이 수탈 체제는 생산과 생활의 자연적 조건 자체를 포괄한다. 포스터의 주장에 따르면 변증법적·역사적으로 착취와 복잡하게 얽힌 마르크스의 수탈 개념은 역사적 체제로서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억압과 물질 환경의 전반적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따라서 오늘날 교환 가치와 관련된 사회적 축적 과정과, 사용 가치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비(非)축적 과정과 관련해 자본의 지속적 수탈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수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여기서 쟁점은 단순히 노동 착취에 그치지 않고 가정 경제(그리고 가정 및 생계 노동), 육체적 삶, 주변부, 지구 환경에 대한 수탈로 확장된다.

역사상 대가 없는 수탈은 계급·계층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생산 방식에서 복잡한 형태로 수행되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중상주의 시대부터 시작해 자본주의 발전의 모든 후기 단계로 확대된 수탈에 따른 이윤의 체계화와 규모의 측면에서 전근대적 자본주의와 역사적으로 구별된다.

2. 역사적인 과정으로서 수탈 국면

다음부터 소개하는 포스터의 분석은 마르크스의 수탈 개념을 이론적으로 통찰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발전에서 인간과 지구에 대한 대규모 수탈은 세 가지 역사

1) 이 글의 일부는 『존 벨러미 포스터』 (김민정,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의 5~7장으로 구성했다.

적 국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면은 농업의 산업화와 물질대사 균열, 둘째 국면은 제국의 흠먼지 폭풍(dust bowls), 셋째 국면은 인류세 제국주의다. 이 구분은 역사상 중요 발전 단계를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착취와 수탈을 포괄하는 역사유물론적 방법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다양한 모순과 갈등을 더 넓은 시각에서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주요 내부 장벽은 자본 자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주요 외부 한계는 어떤 한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경계를 자본주의 거인이 넘어야 할 장벽으로 바꾸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19세기 자본주의가 자행한 아일랜드의 생태계 파괴를 목도하면서 마르크스는 “파멸인가, 혁명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는데, 자본주의가 지구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21세기 상황에서 이 물음은 더욱더 시의적절해졌다.

2-1. 첫째 국면: 농업의 산업화와 물질대사 균열

농업 혁명은 15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인클로저와 토지 소유권의 공식적 이전과 연관된다. 농민과 소규모 토지 소유자는 땅에서 쫓겨나 프롤레타리아화되었으며, 생계 수단을 구입하기 위해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팔아야 했다. 이러한 변화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가 심화하고 도시와 시골이 더욱 뚜렷하게 구분되며 식량과 섬유 생산이 전문화했다. 1830년부터 1880년까지 제2차 농업 혁명은 토양 화학의 발달, 비료 무역과 산업의 성장, 농업 생산의 규모와 집약도 증가, 경작지 전체에 균일성 부여 등 현대 기술을 적용한 토지 개선이 특징이다. 또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토양을 비옥화하기 위한 막대한 비료 투입이 필요했다. 여러 면에서 이 시기는 대가성 없는, 호혜성 없는 수탈의 구체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수천 년 동안 페루의 밭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구아노는 유럽과 미국 등의 밭을 채우기 위해 빠르게 고갈되었다. 섬에 수천 미터의 구아노를 쌓아 두던 바닷새는 채굴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종종 죽임을 당했다. 구아노는 축적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갈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인종차별적 노동 체계는 야만적인 집합 노동 과정에서 광범하게 집행되었으며, 이는 축적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건은 신체 균열을 초래해 생활 조건을 악화시켜 많은 노동자의 건강 악화와 조기 사망으로 이어졌다. 사망한 노동자는 다른 수입 노동자로 간단히 대체되었다.

이 모든 것이 토양의 영양분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탈을 가능하게 했다. 즉 농업의 산업화는 사회적 물질대사를 형성하고 자본주의의 집중적인 창조적 파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토지, 노동, 육체적 생명을 서로 맞물려 수탈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질대사 균열, 제국주의의 세계 남반구 부의 유출 그리고 수탈을 배경 조건으로 하는 착취 체제가 19세기 자본주의의 부상을 낳았다.

2-2. 둘째 국면: 제국의 흠먼지 폭풍

본원적 축적 또는 본원적 수탈의 시대를 지배한 정신은 백인 정착민 식민주의를 포함하는 초기 식민주의였으며,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미국이었다.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영국의 섬유 산업에 공급하기 위한 미국산 면화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예제도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마르크스가 강조했듯 단일 작물과 잔인한 노예 노동으로 이루어진 플랜테이션 노예제는 생태학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 플랜테이션 노예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토양을 황폐화했고, 지주들은 미개척지를 찾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했다. 1830년대와 1840년대 미국의 산업 혁명, 철도 건설, (부분적으로는 멕시코로부터의 토지 탈취를 통한) 서부 개척은 모두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및 강제 이주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로써 생태 파괴와 자본주의 개발이 결합했다.

1930년대에 발생한 ‘흠먼지 폭풍’은 미국에서 최악의 가뭄을 일으킨 악명 높은 재난 중 하나로, 20세기의 생태 위기를 상징한다.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에 따르면 흠먼지 폭풍

은 역사적 귀결이었다. 토지 약탈,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가해진 학살, 노예제, 대지 표면 침식, 토지 경화는 토양 소실과 토양 침식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노동 인구에 치명적 악영향이 초래되리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 이 흠먼지 폭풍과 같은 상황, 즉 흠먼지 폭풍 지대화(dustbowlification)는 1930년대 미국뿐 아니라 다른 식민지 개척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흠먼지 폭풍 이후 대평원에서 인간과 환경 간에 더욱 안정적 관계를 설계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경향, 즉 천연 자원의 점진적 탈취와 사적 이익으로의 전환에 뿌리를 둔 탐욕스러운 토지 수탈 체제에 가로막혔다. 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열을 확대해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였다. 당시의 경제적·생태적 모순의 배후에 놓여 있던 수탈의 사회적 관계는 그 후 수십 년 동안 극복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요컨대 1930년대의 흠먼지 폭풍 위기는 초기 독점 자본주의 시대와 관련된 일련의 생태 위기에서 정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계 백인 정착민 식민지와 식민지 개척 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형태로 나타났다.

2-3. 셋째 국면: 인류세 제국주의

독점·금융 자본과 후기 제국주의의 시대인 오늘날, 광활한 지구는 기후의 작용이 아니라 세계 인구의 착취와 과잉 착취를 위한 수단으로 자연의 정복을 조장하는 세계 경제 체제의 논리 때문에 건조 지대로 변모하고 있다. 아마존 불태우기, 산호초 표백, 해양 고갈, 생물종 대량 멸종, 세계 담수원 건조와 오염에서 볼 수 있듯 지구의 공유지 곳곳이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구 생태계의 대량 학살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생태 위기의 최전방 지역과 세계 남반구에 사는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현재 지구 시스템 위기는 바다에서 민물 그리고 그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인류세의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의 역학 관계는 강수량의 변화, 담수원의 건조와 오염, 필수적인 급수탑인 산악 빙하의 용해 등 지구의 수문학(hydrology)적 순환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수면 상승, 사막화, 기상 이변 때문에 세계 남반구 저위도 지역에 사는 수억 명이 국가 내부 이주 또는 해외 대량 이주의 형태로 고향을 떠나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남반구 인구의 절반이 사는 라틴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세 지역의 내부 이주 인구만 2050년까지 1억 43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한편, 부유한 국가는 다국적 기업을 통해 세계 남반구 인구를 과잉 착취하는 동시에 난민(기후 난민 포함)을 막기 위해 국경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미 벽을 쌓고 있다.

포스터는 우리가 담수 감소를 막기 위한 투쟁과 새로운 화석 연료 공급원을 찾기 위한 투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끝없는 자본주의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자본주의 세계화의 결과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해 지구가 급속히 뜨거워지고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 한계를 모르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주도하는 광란 속에서, 세계적으로 마지막 남은 담수, 화석 연료와 기타 희소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필사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3. 수탈과 착취의 변증법

좌파의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키려는 여러 시도는 마르크스의 착취 이론을 자본주의 현실의 필수적 부분이자 이와 교차하는 여러 억압과 연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포스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연결을 위해서는 고전적 역사유물론에서 수탈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탈과 착취의 변증법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역사상 억압은 여성의 예속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왔으며, 사유 재산을 매개로 노예, 농노, 임금 노예라는 세 가지 기본 형태의 노예를 발생시켰다. 인간의 역사는 토지, 노동력, 육체적 삶에 대한 수탈 체제의 역사였으며, 자본주의적 착취 시스템은 그중 가장 발달하고 가장 야만적인 형태다. 농업의

산업화와 지구적 물질대사 균열, 1930년대의 흠먼지 폭풍 시대, 인류세의 제국주의 등 수탈의 역사적 국면은 모두 자본주의 체제의 야만적 핵심을 보여 준다.

포스터는 이 모든 것은 착취와 수탈이라는 조건을 떼어 놓고 자본주의 관계의 총체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착취와 수탈은 자본주의 체제를 특징짓는 억압의 양상불을 만들어 낸다. 자본주의 지배의 여러 상호 연관된 측면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혁명적 실천이 필요하다.

4.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제국주의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은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 레닌이 쓴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다. 이 책의 강점은 경직된 이론 공식에서 벗어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에 있다. 이 책에는 독점·금융 자본의 성장, 국제 신탁을 통한 세계 분할, 자본 수출, 에너지와 원자재 경쟁, 계급 투쟁, 경제 영토와 영향력이 있는 영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노동 귀족의 출현, 세계·지역 헤게모니 경쟁 등 다양한 현상이 담겨 있다. 포스터에 따르면 1920년대에 멕시코, 터키(튀르키예), 페르시아, 중국, 인도에서 일어난 혁명적 투쟁에 주목한 레닌은 모든 제국주의에 억압받는 식민지와 국가, 모든 종속 국가로 분석 영역을 확장해 국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주변부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상 역사는 연속성과 변화의 변증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1960년대에 이르러 레닌의 제국주의 분석은 그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서 막강한 헤게모니를 쥐고 부상했고, 전 세계적으로 식민주의와의 단절, 신식민주의의 부상, 사회주의 열망을 가진 국가를 포함한 경쟁 국가의 출현과 함께 역사적 혁명 물결을 마주했다. 이렇게 변화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은 자본주의 이념 틀 안에서 경제 성장, 개발, 원조, 현대화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베트남전쟁 시기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는 해리 맥도프의 《제국주의의 시대: 미국 외교 정책의 경제학(The Age of Imperialism: The Economics of U.S. Foreign Policy)》(1969)이 있었다. 포스터에 따르면 맥도프는 20세기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제국주의에 대한 다른 주요 마르크스주의 이론가가 그리했듯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열쇠로 독점 기업의 부상과 함께 자본의 집중과 중앙 집중화를 강조했다. 맥도프는 레닌 시대 이후 제국주의 구조의 주요 변화는 탈식민지화와 미국 패권의 부상을 넘어선 모든 독점 자본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변화로 ① 군산복합체의 출현, ② 다국적 은행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의 부상과 주변부 침투 확대, ③ 국가 업무에 대한 군수-다국적 산업의 이익 우선순위 등이 있다. 맥도프는 이러한 변화가 우선은 미국에서 발견되지만, 그 경쟁자인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구체적 관계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즉 맥도프는 미국에서 시작된 후 세계를 지배하게 된 더욱 일반화된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체제 내적 경향을 설명했다. 《제국주의 시대》에서 핵심은 다국적 은행과 금융 전반의 현상을 조사한 금융 네트워크의 성장에 관한 장인데, 이는 맥도프가 1990년대 초에 출간한 《세계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Globalization: To What End?)》에서 수행한 금융의 세계화 분석으로 이어졌다.

포스터는 1970년대 중반의 경제 침체에서 신자유주의와 함께 등장한 생산(과 금융)의 세계화가 소련형 사회의 몰락과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 재통합으로 가속화되는 과정을 후기 제국주의(late imperialism)라고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맥도프와 바란, 스위지, 사미르 아민(Samir Amin)과 같은 사상가가 이론화한 독점 자본주의를 더욱 일반화했다.

5. 제국주의 단계

레닌이 제국주의 비판을 전개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한 세기 동안 세계 자본주의가 변화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변화뿐 아니라 연속성을 포괄하는 역사적 변증법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제국주의는 이론적 범주인 동시에 역사적 범주다. 반세기 전에는 우리의 시대를 맥도프처럼 ‘제국주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제국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독점-금융 자본의 일반화, 생산의 세계화,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잉여 추출, 획기적인 경제·군사·환경 위협으로 이루어진 후기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체제 그리고 인류 사회 전체가 직면한 위기는 이제 매우 심각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신흥 경제국 모두에서 새로운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신·구 파시스트 성향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가 부흥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연속성에 대한 인식은 현재 단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제국주의의 각 역사적 단계는 세계 규모의 축적을 위해 각각 다른 착취와 수탈 수단에 의존했다. 핵심 제국주의 국가는 항상 체제의 중심부에서 권력과 축적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주의 주변부 또는 전자본주의 외부 지역의 노동을 재구조화하려 했다. 동시에 핵심 제국주의 국가는 종종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영역을 놓고 경쟁하기도 했다. 16~17세기 중상주의 단계의 초기 식민지 시대에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 대부분에서 원주민 학살, 노예화, 광산 약탈 등 자유로운 교환이 아니라 수탈을 통한 이윤 증식이 체제의 주축을 이루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식민지 시대, 즉 영국의 패권 아래 자유 경쟁이 벌어지던 단계에서는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작동했지만, 이와 동시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교환과 노골적인 수탈이 지배적이었다. 19세기 식민지 자본주의는 세기말에 이르러 레닌이 말한 제국주의, 즉 모든 강대국의 독점 자본 부상, 영국의 헤게모니 쇠퇴, 핵심 자본주의 강대국 간의 세계 분단에 대한 긴장 고조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영토에 대한 패권을 차지하려는 경쟁자들 간의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패권국으로 부상했으며, 사회주의 중심의 경쟁국들과 냉전을 벌였다. 미국은 자유무역과 개발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도 다국적 기업, 달러 패권, 전 세계에 걸친 군사 기지를 통해 신식민주의 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군사 개입과 지역 전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세계 남반구 국가의 경제 흑자 대부분이 국외로 유출되었다.

이 새로운 제국주의 단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자본이 집중되고 독점이 압도적 우세를 점하며, 금융 자본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자본이 수출되며, 세계가 지정학적·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역으로 분할되는 특징을 띤다. 지난 세기 마지막 사반세기에 일어난 세계화의 가속화는 세계 경제의 제국주의적 구조를 약화하거나 해체하는 대신, 세계 경제에 다른 국가가 편입되는 구조적 비대칭성을 심화했다. 소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세계 차원의 생산 과정, 국제 경제의 금융화,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 증가를 부분적으로나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지만, 대다수 국가에서는 대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중심부와 격차가 확대되었다. 요컨대 세계화는 제국주의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 주변 자본주의의 종속을 심화했으며, 주변 자본주의는 국내 경제 과정을 조금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독점-금융 자본의 부상과 함께 세계는 제국주의의 대체가 아닌 제국주의의 새로운 단계, 즉 후기 제국주의로 접어들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 제국주의 단계에서 체제의 지구적 모순은 더욱 극명한 형태로 드러나고, 인간의 거주지로서 지구 전체는 위협에 처했으며, 그 파국적

영향은 세계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된다. 이 모든 것은 사회 체제로서 자본주의의 실패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더 큰 지정학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6. 독점·금융자본 체제

포스터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발생한 제국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세계 독점·금융 자본 체제 또는 '일반화된 독점' 자본주의로 묘사한다. 더욱 통합된 제국주의 체제에서 500개 기업이 세계 매출의 거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기업 대부분은 거대 기업의 거미줄에 얽혀 단순한 하청업체로 존재한다. 생산과 유통은 이제 글로벌 상품 사슬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품 사슬 내에서 중심부와 주변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이는 글로벌 노동 차익 거래와 맞물려 있다. 글로벌 노동 차익 거래는 남반구의 노동 착취와 수탈을 강화해 그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북반구가 가져가도록 한다. 이에 더해 세계 금융과 통신에 대한 제국주의의 통제 강화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생산의 세계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신자본주의 세계화가 가속하면서 금융 중심지가 지배하는 세계 시장의 규칙에 종속된 국가, 세계 남반구의 몇몇 국가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후기 제국주의는 경제 침체, 금융화, 지구 생태 위기가 독점 자본주의 축적 시스템 자체와 연결된 비가역적 균열로 나타나고, 신자본주의에서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찾은 시기로 볼 수도 있다. 현재의 후기 제국주의에서는 독점·금융 자본의 전횡과 장기 경제 침체, 미국의 헤게모니 쇠퇴, 세계 분쟁 증가와 함께 문명과 생명 자체의 생태적 기반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후기 제국주의의 핵심은 21세기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극단적 위계 관계, 즉 거대 다국적 기업과 세계 체제의 중심에 있는 소수의 국가가 점점 더 지배력을 키우는 데 있다.

한편으로 후기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질서의 역사적 종착점으로, 지구적 재앙 또는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예고한다. 오늘날 지구 시스템 비상사태는 자유 일반을 위한 오랜 집단 투쟁에 새로운 긴박성을 부여한다. 더 광범한 인류의 투쟁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세계적 발현인 제국주의 타도를 목표로 하는 세계 노동자·인민의 지속적 혁명 저항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주변부 국가의 노동이 자유로워지고 제국주의가 폐지될 때까지 중심부 국가의 노동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지속 가능한 인간 발전의 사회는 오직 보편적 기반 위에서만 건설될 수 있다. 모든 편협하고 악의적이며 착취적인 관계는 사라져야 하며, 인류는 동종과의 관계와 지구와의 통일성을 냉철한 감각으로 직시해야 한다.

7. 제국주의 관점

미국에서 혁명적 관점이 국제주의·반제국주의를 견지해 온 흑인 운동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급진 좌파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한 새로운 운동의 대표자 중 일부는 미국의 무자비한 해외 개입에 눈을 감고 있다. 레닌이 《제국주의》에서 언급했듯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사회주의 운동을 결정적으로 분열시킨 쟁점은 제국주의 문제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하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부상하면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감소했다.

포스터의 주장에 따르면 제국주의 문제를 경시하는 흐름은 생태 제국주의 또는 불평등한 생태 교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서 좌파의 성과가 매우 미약해진 문제로 이어졌다. 이는 자본주의가 세계 자원의 대부분과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수탈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탐구하지 못한 결과다. 생태 제국주의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교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가치 수탈의 문제로 이어진다. 예컨대 영국 식민 통치하 인도에서 발생한 기근은 영국이 인도의 식량 체제를 강제로 변경해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사용 가치, 물질대사와 수문 인프라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인도의 잉여를 빼앗아 간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생태적 과정이 인도와 여러 세계 남반구 지역의 좌파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반면, 북반구의 마르크스주의자는 이를 여전히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영양이 부족해진 유럽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려는 목적하에 구아노를 대량 수탈당한 페루가 장기적으로 온갖 부정적 영향에 시달렸고, 구아노를 캐기 위해 노예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중국 노동자를 수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Eduardo Galeano)가 ‘라틴아메리카의 절개된 혈관(Las venas abiertas de America Latina)’이라고 불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절개된 혈관 사이로 끊임없이 분출하는 것은 이 지역에 신이 선물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외세의 수탈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인민의 피가 될 수도 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생태와 제국주의의 문제는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점점 더 밀접하게 얽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평화연구소의 《생태 위협 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50년까지 12억 명에 달하는 이들이 고향을 떠나 기후 난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제국주의는 제국주의가 초래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와 분리해서 분석할 수 없으며, 지구 생태계의 위기 또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제국주의와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클라크와 포스터가 《자연의 강탈: 자본주의와 생태학적 균열》에서 전하려 한 내용이다.

오늘날 지구적 비상사태를 초래한 주범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기하급수적 성장,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수십 년 동안의 급속한 성장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본은 그 자체로 경제적(상품) 가치를 스스로 확장하는 사회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계급 착취에 기반을 두고 시장 경쟁의 운동 법칙을 따르는 자본주의, 즉 자본 축적 체제는 자기 확장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이 체제에서 지구 환경은 인간이 지구의 다른 종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고유한 경계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무한한 이득을 위해 경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착취해야 할 영역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부는 극소수의 손에 들어간다. 자본의 내적 논리에 따르면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하고, 체제 자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한 물질대사 관계를 훼손하는 경제적 이성의 광기를 조장한다.

그러나 추상적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를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지구적 규모의 축적 구조, 세계를 경쟁으로 몰고가며 분열시키는 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급과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조직되고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

어 있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 즉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구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늘날 이는 필연적으로 인류세의 제국주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정치경제적 모순과 생태적 모순이 함께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자본의 구조적 위기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국주의 체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파악하고 있다.

8. 후기 제국주의와 인류세

사미르 아민은 상품 생산 과정에서 주변부 또는 세계 남반구에서 유출되고 제국주의 지대에서 파생되는 초고수익이 역사적으로 교환 가치 이전과 사용 가치 이전이라는 두 형태를 취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 중 후자인 사용 가치 이전은 생태 제국주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원의 추출은 종종 가난한 국가를 황폐화했으며, 이들 국가는 추출에 따른 생태적 비용을 치르는 것과 더불어 자연의 무상 선물을 수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친 제국주의는 대규모 독점 기업의 지배를 특징으로 한다. 이 때문에 레닌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단계를 독점 자본주의와 동일시했다. 최근 단계인 1970년대 이후 제국주의 체제는 독점·금융 자본의 지배력이 커지는 형태를 취하며, 이는 글로벌 상품 사슬 형태를 띠는 고도 생산 세계화로 나타난다.

물질적 발자국 분석을 통해 2008년 전 세계 원자재 추출의 40퍼센트가 다른 나라에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역에서 원자재 등가물(구체화된 1차 원자재)의 1인당 수입은 일본, 영국, 미국이 주도하는 부유한 경제에서 높았다. 부국 경제에서 자원 집약적 공정은 전반적으로 외부화되고, 원자재 수입의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수출과 관련된 추출 자원의 총 물질 흐름 중 약 2/3가 주로 가공된 폐기물 및 보조 물질 흐름으로 수출국에 남아 있으며, 이는 종종 경제적 외부효과로 분류되는 상당한 생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생태 수탈이 수 세기에 걸쳐 지구 남반구의 식민지와 신식민지에서 직접 벌어진 다양한 방식의 착취를 통해 발생했다면, 생태 제국주의의 영향은 지구 공유지 즉 해양과 대기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1982년 해양법이 통과된 이후 전 세계 바다의 거의 절반이 국가 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며, 대부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묶여 있다. 대부분 작은 섬나라이지만 영국과 미국 같은 대국도 포함하는 83개 국가가 이제 육지보다 더 넓은 바다를 영토 관할 구역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 자원의 개발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을 수탈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주요 제국주의 국가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특히 해양 관리에 민영화 체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주요 제국주의 국가는 이들 국가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이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다국적 기업이 소규모 국가와 영세 어민을 배제하고 어업과 해저 자원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이른바 해양 포획(ocean grabbing)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제해저기구도 국제 해저가 공유지임에도 국가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석유, 천연가스, 광물, 귀금속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반구보다 남반구가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한데, 이러한 기후 균열에 대해 북반구의 경제·군사 권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남반구의 취약성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 안보 문제를 야기하는지 탐구하는 것, 둘째, 제국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행정부의 대전략(Grand Strategy) 중 하나이던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세계 에너지 지배와 이를 활용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영향력 확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류세 제국주의의 전략적 재편은 ‘화석 연료’와 ‘물’이라는 두 천연자원 통제 경쟁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미군은 특히 석유와 물과 관련된 새로운 취약성에 대비하며 미국의 세계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군사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글로벌 가치 사슬과 자원 사슬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전략화함으로써 미국의 요새를 강화하고,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일본·중국 등 후발 파트너와도 협력하고 있다.

9. 자본주의의 멸종 단계

포스터에 따르면 서구 생태 운동에서 인류세 제국주의의 문제를 주되게 분석하지 않는 것은 큰 약점이다. 행성 단위로 불거지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이미 지구 남반구의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 이는 세계적 불평등과 식민주의·제국주의의 오랜 역사와 관련이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악영향이 세계적인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기후 변화는 지구적 문제이며, 이를 주도하는 자본주의 권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가 전 지구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점은 좌파도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지구 균열을 대표하는 제국주의가 화석 연료 시스템과 환경 파괴와 인간 착취를 극대화하는 현 체제를 고수하려는 움직임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려는 인식은 현재 극히 드문 실정이다.

포스터에 따르면 이 모든 균열과 위기는 제국주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자본주의 비판이 현재의 시대적 위기에 맞서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인류세의 위기에 확실하게 맞서려면 자본의 축적을 최우선시하는 체제로서 자본주의에 대한 일반적 비판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지구 기후 변화의 근원을 포착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실질적 평등, 즉 사회주의에 기초한 반자본주의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본주의가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를 사회 시스템으로서 쓸모없게 만든다.

이렇게 분석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단지 거기서 멈출 수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일반화된 독점·금융 자본의 현실과 기후 변화로 더욱 악화되는 세계가 중심부와 주변부, 세계 북반구와 남반구로 깊고 체계적으로 분열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1세기의 거대한 제국주의적 맥락을 바탕으로 삼는 자본주의가 실제 역사적 체제로서 존재하므로, 이에 반대해야 한다.

10. 국제적인 사회운동의 전략을 위한 공해 사슬 구조: 노동력 재생산 구조와 공해 발생 간의 관계

생산영역과 소비영역의 공해에 대한 피해는 법과 행정 체계 안에서 입증해야 배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방의학자이자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이었던 하미나는 사법부의 무죄추정의 원리와 환경문제에서 인과관계보다는 개연성 등을 제시하면서 공해 피해자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법의 영역인데 이 법의 정신이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받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 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주장을 하려면 내가 입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법에서는 검사가 저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고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저 사람이 가해자라는 걸 입증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건데 특히 민법을 통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환경 문제는,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공공적인 어떤 공적인 의미를 가지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에 문제가 생긴 거는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거는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공익적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경법에서는 그 입증 책임이 상당히 완화

가 돼 있어요.²⁾ 민법에 비하여. 환경 관련 법에서는 환경에서는 그걸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해서 그걸 완화시켜줘서 우리가 인과관계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을 못해도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라고 추정이 되면 입증한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법에서는 인과관계 추정으로 돼 있어요 그 조항이. 근데 이제 추정은 그러면 뭘로 하느냐 그게 이제 상당한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연성이 있으면, 저것 때문에 이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추정됐다고 해주고 그것을 인과관계 입증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환경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또 어폐가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건강 피해에서 보면은 이 상당한 개연성은 또 두 가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인과관계와 개별적인 인과관계 두 개를 입증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뭐냐 예를 들면 이제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생겨. 그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모든 우리 집단을 대상으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 그게 이제 일반적 인과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됐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특정 A라는 사람이 흡연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폐암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손해배상, KT&G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알았어 맞아 그래 알았어. 근데 니가 담배 핀 것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는 거를 입증을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폐암은 흡연에 의해서만 생기느냐? 아니죠. 다른 어떤 작업장에서 다른 무슨 유해물질 그다음에 어떤 라돈을 많이 흡입을 한다든지 그렇죠 방사선 등등 그다음에 가족력 유전적인 문제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냐고 피해자가. 그래서 보면 번번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는 거야.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해가지고,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런 걸 모르니까 특이성 질병 비특이성 질병 이렇게 나뉘어서 비특이성 질병은 피해자가 더 추가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거의 입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 법에서 인과관계 입증을 상당히 추정으로 완화시켜 주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가슴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여러 번 개정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개정한 게 인과관계 추정도 엄청나게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만 충족시키면 되도록 해놨어요. 하나는 이제 노출된 사실을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내가 가슴기 살균제를 썼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건강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내가 가슴기 살균제 쓰고 나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가슴기 살균제 사용 후에 건강 문제가 생겼어. 또는 건강 문제가 더 악화됐어. 이 두 가지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가슴기 살균제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질병하고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이거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이제 역학 연구를 통해 갖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관련성이 있게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학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역학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하나 정부가 하는 거예요. 환경부가. 그래서 환경부가 연구를 해서 역학적 상관관계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법에.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한 한 질병에 한해서 피해자가 이제 내가 가슴기 살균제를 썼어. 그다음에 가슴기 살균제를 쓰고 나서 내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가 됐어. 이거를 피해자가 이 두 가지를 입증을 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놓은 거

2) 대법원 1991.7.23. 89다카1275 판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https://www.law.go.kr/%ED%8C%90%EB%A1%80/(89%EB%8B%A4%EC%B9%B41275).

쥬.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과관계 입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세 가지를 이제 피해자가 정부에 힘을 빌어서 입증을 하면 인과관계가 추정이 되는데 단 거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사업자가 사업자가 이 사람의 건강 문제가 가슴기 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라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을 하면 인과관계 추정이 깨지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도 뭔가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법정에서는 이제 서로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가 그러니까 과거에 상당한 개연성 원리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던 것을 사업자가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을 그러니까 개별적 인과관계에 반대를 입증하도록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과관계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실질적으로 전환됐다(2023년 6월 21일 인터뷰 내용의 일부, 강조 인용자).

사법적 전제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환경문제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환경법에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상당한 개연성’의 입증으로 완화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영업상의 비밀 원칙과 재산권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공해 입증은 한계가 있다. 공해 사슬 구조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영업 행위가 구조적으로 공해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회과학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공해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 사실을 명확하게 전한다. 이는 공해 발생이 시장 외부 효과 및 비정상적인 행위이거나 부도덕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개별 사안으로 다루어졌던 피해 사례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는 관점을 제안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하면 공해 사슬 구조 관점의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본다. 포스코의 공해와 가슴기 살균제 피해의 두 사례에 주목해 생산 영역 안에서 공해와 산업재해 사이의 연결고리와 생산영역과 소비영역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해 공해 사슬 구조의 열개를 파악한다(〈그림 1〉 참조).

자본주의의 계급 관계는 인간과 자연 관계에서 자신만의 특수한 특징을 부과하는데, 이는 직접 생산자 또는 노동자가 생산에 필수적인 자연 조건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정에서의 직접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는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단절을 가져온다. 생산의 목적이 자연환경의 고려와 무관한 가치 생산에 있기 때문에 환경의 외부화를 낳는다. 자본가들은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산 수단을 불변 자본으로 취급한다. 자본은 부를 균질적이고 나눌 수 있고 양적으로 무한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자연의 질적 다양성과 생태적 상호연관, 양적인 한계와 모순된다. 이는 자신들의 생산에 필요한 자연자원의 황폐화와 고갈은 고려의 대상이지만 그밖에 있는 자연생태계는 가치화되지 않는다.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관계가 생산영역에선 공해를 발생한다.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분리는 결과적으로 생산의 무계획성을 낳고 이는 상품의 실현에서 과잉 생산 및 과잉 소비를 가져온다. 상품과 화폐의 변환을 통한 자본의 가치증식은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증폭시키며 공황을 통한 사회적 위기를 내포한다. 계획되지 않은 과잉 상품 생산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실현되지 않아 대량으로 폐기처분되는 현상이 자연자원의 낭비를 낳는다. 자본의 끊임없는 잉여가치 생산 과정은 확대 재생산을 낳고 이는 전 세계적인 자본관계의 확대를 수반함으로써 환경 문제는 전 지구화 된다.

자본주의에선 ‘절약’과 ‘낭비’, ‘개선’과 ‘악화’가 모순적으로 작용한다. 개별 자본들은 자기 사업장 안에서 일정정도 계획을 하며 고정 자본의 절약을 통한 이윤을 증가를 도모한다. 하지만 개별 자본가들의 계획들의 합은 총자본에선 무계획성으로 나타나는 모순에 처한다. 개별 자본가들의 고정자본의 절약은 사회적으로 공해의 외부화로 나타난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부의 화폐적 표현인 추상적 노동 시간과 구체적 노동 사이의 긴장이 환경 외부화로 나타난다. 개별 이익과 공동 이익의 모순은 공해를 더욱 증폭시킨다. 개별 사업장의 환경 개선 효과가 사회적으로 공해

의 악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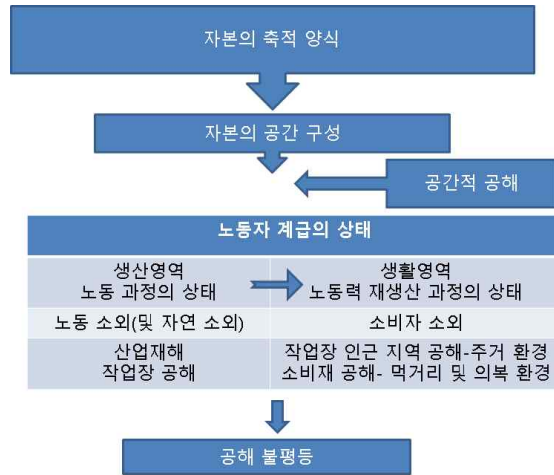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필연적으로 환경 문제를 심화시킨다.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생산 방식은 자본에 의한 자연의 황폐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자본에 의한 환경 문제의 발생이자 심각성이고 이러한 특성이 환경 문제의 계급적인 문제다. 생산영역에서 환경 문제의 계급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환경 문제의 결과는 유통영역에서 환경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생산영역에서 노동자로서의 착취와 유통영역에서 소비자로서의 불평등은 구별된다.

노동자계급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축적 양식이 규정하며 구체적인 영역은 노동과정의 상태(생산영역의 상태)와 노동력재생산과정의 상태(생활영역의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은 자본축적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형(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으로 결정되며 노동과정의 변형 또한 노동력의 재생산양식인 노동자계급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준다. 마르크스의 논의를 발전시켜 노동의 순환은 노동력의 판매과정=노동시장, 노동력 소비과정=노동과정, 노동력의 재생산=노동자의 소비생활로 정의한다. 이처럼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속성은 자본에 따른 지속적인 소모와 그에 대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필요로 한다.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으로 소비되는 노동력이 가치인 임금에는 고용 기간 중의 노동자의 단순 재생비, 휴업 및 질병 등에 따른 실업 유지비, 자녀 양육에 대한 세대 간 재생산비를 포함한다.

자본축적은 노동과의 관계에서 공간적 차별성을 활용한다. 자본축적은 불균등지역발전을 통한 자본의 이동 능력 증대와 노동의 공간적 차별화에 기초한 노동의 공간 분업을 형성한다. 생산이 공간조직과 직업적 사회 공간 조직 간의 관련성은 사회경제적 계층을 공간 및 지리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자본의 공간재구조화 과정은 이동, 거리와 분리, 고유한 장소성까지 공간적 재구조화가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축적체제와 관련한 노동의 공간분업구조와 공간적 공해가 연결되어 있다.

자본의 논리로 공간 배치가 결정되면 동일한 오염원의 입주 형태와 기존의 환경소비자층의 형태에 따라서 환경 불평등이 발생한다. 우선, 초기에 발생한 환경 문제는 오염원의 입주 형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해 지역과 덜 열악한 공해 지역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거주 지역 내부에는 사회적인 소비자 계층이 존재한다. 각 지역의 소비자 계층에 따라서 오염원으로부터 유발된 환경 불평등에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환경 불평등이 발생한다.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 발생한 환경 불평등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재조정된다. 재조정되는 요인에는 국가의 환경정책, 기업의 환경 경영, 반공해 운동 등 사회적 세력관계에 따라서 환경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약화된다. 환경 불평등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은 다시 환경 불평등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면서 피드백이 된다. 환경소비자층과 오염원의 입주형태가 좀 더 객관적인 요인이라 한다면 국가의 환경 정책과 기업의 환경 경영, 반공해운동은 주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요인들은 사회적 관계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원인과 결과처럼 끊임없이 순환을 반복한다.

〈그림1〉 노동력 재생산 구조와 공해 발생 간의 관계



노동계급 상태연구의 일반 원리를 기초로 노동력재생산 구조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력 재생산구조를 규정하는 자본의 축적과정 및 그 성격이다. 포항과 광양 지역에서 포스코의 운영은 이 지역의 노동력재생산구조에 핵심이다. 포스코의 집적과 집중이 강화될수록 노동력재생산구조의 구조적 힘은 강화된다. 생산 영역에서는 노동의 소외와 산업재해 작업장 공해가 발생한다. 둘째, 포스코의 고용 형태와 노동 조건은 소비구조를 비롯한 생활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생활영역에서는 소비자 소외와 작업장 인근 지역 공해 및 소비재 구매로 인한 공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력재생산과정이 노동의 재생산과정에서 노동과정 및 노동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노동계급의 상태는 노동의 세 가지 순환 영역인 노동과정, 노동력재생산과정, 노동시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10-1. 공해사슬 구조의 함의

자본의 축적 양식과 노동력 재생산 구조에서 파악한 공해 사슬 구조와 구조적인 통합 재난 대응과 공해 불평등 완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재난 및 참사의 원인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 ‘공해 사슬 구조’는 생산 영역과 소비 영역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개별 재난 사례를 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 재난 사안의 특수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편성을 발견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작업은 한국 재난의 특징을 발견해서 해외의 재난 사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로 재난 및 참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를 대응하는 방안도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재난 관리 매뉴얼과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통합적인 공해 사슬 구조에 대한 원인 규명은 피해자의 수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난의 원인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재난의 해결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개선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피해 보상의 차등적 절차로 분열한 피해자 모임의 한계를 극복해서 통합적인 피해자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재난 및 참사의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분절적인 현행 재난 대응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재난 및 참사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못(안)하는 관행적 사고 틀도 있기에, 문제의 원인 규정을 정확하게 내리는 이론적 작업이 필요하다. 참사의 원인이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거시적인 맥락에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참사를 대응하는 해결방안도 지엽적인 차원에 머물 수 있다는 한계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사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재난의 피해에 대한 입증이 법적 및 행정적 차원에서 진행될 때 피해 입증과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지지부진한 과정은 (잠정적) 피해자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자가 줄곧 강조해왔듯 “내 몸이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법적·행정적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인 규명의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재난의 발생 구조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면서 법적 입증 과정에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재난 발생에 책임이 있는 주체, 주로 국가와 가해 기업이 재난 및 참사의 발생 원인을 단기적 및 일면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데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공해 사슬 구조’는 재난 및 참사의 피해를 ‘느린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공해 사슬 구조’ 분석은 ‘느린’ 재난 담론의 형성 기저에는 재난의 객관적인 피해 양상뿐 아니라 피해를 규정하고 수용하는 사회 제도에 있음을 밝히는 작업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Foster, J. B., Clark, B., & Holleman, H.(2019). Capitalism and Robbery: The Expropriation of Land, Labor, and Corporeal Life. *Monthly Review*, 71(7).
- Foster, J. B. & Clark, B.(2020). *The Robbery of Nature: Capitalism and the Ecological Rift*. Monthly Review Press.
- Foster, J. B.(2006). *Naked Imperialism: The U.S. Pursuit of Global Dominance*. Monthly Review Press.
- Foster, J. B.(2019). Late Imperialism: Fifty Years After Harry Magdoff’s The Age of Imperialism. *Monthly Review*, 71(3).
- Foster, J. B. & McChesney, R. W.(2012). *The Endless Crisis: How Monopoly-Finance Capital Produces Stagnation and Upheaval from the USA to China*. Monthly Review Press.
- Foster, J. B., Holleman, H., & Clark, B.(2019). Imperialism in the Anthropocene. *Monthly Review*, 71(3).
- Foster, J. B. & Clark, B.(2020). *The Robbery of Nature: Capitalism and the Ecological Rift*. Monthly Review Press.